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 | 2021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소비자를 위한 정책 좌담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

□ 좌담회 개요

- 일 시: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 주 최: 컨슈머워치
- 사 회: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30~10:35	5'	개회 - 장내 정리 및 행사소개	사회자
10:35~10:55	20'	토론 1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10:55~11:15	20'	토론 2 - 김정옥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11:15~11:35	20'	토론 3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11:35~11:45	10'	종합 정리 및 폐회 -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토 론 Ⅰ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3

토 론 Ⅱ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11

토 론 Ⅲ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9

ㅣ 좌담회 자료 ㅣ

학부모들은 왜 그린스마트 학교를 거부하는가!

토론 ㅣ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박 소 영

학부모들은 왜 그린스마트학교를 거부하는가!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시작하며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그린스마트 학교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학부모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 그 이유이다. 혁신학교 반대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로 오해하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학부모들의 반대이유를 들어보면 분명 선정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다.

먼저 학부모의 제보를 토대로 학부모의 입장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학부모 입장>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되는 학부모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2.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상의 이유로 개축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000 재건축 아파트들의 안전등급이 D~E등급인 반면 000 초·중의 안전등급은 A~C등급
3. 학생들의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개축 시 예상되는 학생 안전과 불편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 졸속행정, 탁상행정, 개축 시 학생들은 운동장에 마련된 모듈러 교사에서 생활하거나 근거리 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피

4.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혈세낭비이며 재건축 문제와 연계한 사업계획은 필수임에도 교육청은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함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면 노후화 개선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기존에 배정했던 예산마저 다 삭감해버림

5.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편파적이고 제한적인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학교 노후를 앞세워 단순한 리모델링만 강조한 채 짧은 기간내의 공산당식 기명투표를 진행함. 이로 인해 도출된 왜곡된 결과를 근거로 삼아 졸속으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함

6. 모듈러 교사의 문제점

- 맨 앞줄에 앉은 아이는 칠판이 가까워 눈이 아프고 맨 뒤에 아이는 벽에 등이 닿아 불편

- 15도 밖에 개폐가 되지 않는 창문을 설치로 자연환기가 되지 않아 학생들이 어지러움 및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호소

- 창문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화재 발생시 대피조차 할 수 없다는 것, 대피 통로와 비상계단이 좁아 화재 시에 대피가 어렵고, 소방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여 스프링쿨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화장실은 한 개 층에 6개의 반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양변기가 5개 뿐, 저학년 남학생은 신체 사이즈보다 소변기가 높아 불편함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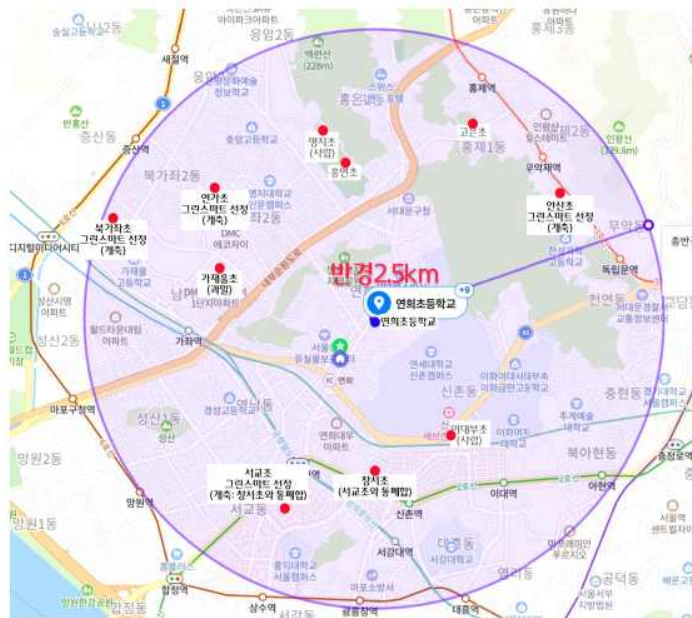
- 모듈러에 대해 문제 제기하자 업그레이드가 된 38억짜리 추가 모듈러를 설치해 준다고 함

7. 개축 대상 학교들은 전학을 가야하는데 인근 학교 상황을 고려해도 문제가 많음

(1) 연희초 관내 반경 1.3km 이내: 초등학교 없음.



(2) 연희초 관내 반경 2.5km 이내: 10개 학교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학교 4개, 과밀학교 1개, 통폐합 1개, 사립초 2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 2020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신축으로 계획하고 시행하였으나 희망하는 학교가 적어 2021년 개축과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1차 시범사업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음
- 정책사업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는 없음
- 이 사업은 단순 리모델링·개축·신축 사업이 아니다. 교육과정 변화를 위한 사전 작업임

<서울시교육청 시설개발과의 회의 내용>

“이 사업은 단순 리모델링, 개축, 신축 사업이 아니다. 향후 추진할 교육 과정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강제로 전학을 가야하거나 운동장에 세워진 임시교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학부모가 설계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은 없다.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설명해 줄 수 없으며, 전문가들이 계획 단계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

“사업 대상학교의 안전 진단 등급은 중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준공된 년도를 기준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하였다. 40년 이상된 학교는 무조건 대상학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임시교사와 강제 전학 등을 포함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 공사 시에 발생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이 없다.”

이 글을 마치며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

해 의문을 갖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강제 전학과 임시 교사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사업 시행 시에 학생들의 강제 전학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주변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결국 학생들이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학교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교 건물도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임시 교사와 화재 위험에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임시 교사 안전 문제가 거론되자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약으로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절차와 안일함에 학부모들은 분노하는 것이고, 때늦은 업무 협약으로 가건물인 임시 교사의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학부모들은 책임 있는 기관에서 임시 교사인 모듈러 교사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선정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될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Ⅰ 좌담회 자료 Ⅰ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에 대한 토론

토론 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 정 욱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토론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학교건물 시설개선사업을 한다면 4,5십년 전과 달라야 하고 공간 활용도 달라진 학습 환경에 맞추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마치 대단한 시혜적인 정책이라도 추진하는 양 교육부가 호들갑을 떨었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II. 국가정책의 타당성 측면

우선 동 계획이 **거시적인 국가교육정책**으로서 어떤 흠결이 있는지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미래학교'인가?

종합추진계획안(2021-2-3)에 제시된 5개국의 해외 미래형 학교 사례(p.29)는 대한민국과 같이 일률적이고 전국 규모로 이루어지는 학교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다. 5개국 대부분의 사례가 사립학교이거나 최소한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보장된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하고 제한된 사례이다.

따라서 단순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마치 학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형태가 종합적으로 변화되는 미래 시대를 대비한 '미래학교 추진사업'이라고 명명한 것은 넌센스이다. 국가중심으로 일률적이고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공교육을 맡은 학교들은 그 책임과 권한 등의 한계로 인해 해외사례와 같은 다양한 미래학교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2. 국가예산의 효율성 및 우선순위에 맞는 정책인가?

기존의 학교시설관리의 대원칙은 안전 진단에 의해 학교 건물을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E등급은 개축 대상, D등급은 안전성 보강공사 대상이 된다. 본 계획서 내용대로 40년 이상 노후화 건물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40년 되었다고 해서 노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실제로 안전진단 C등급 이상 건축물도 상당수 해당할 것이다. D등급의 경우도 대다수 보강공사를 마친 상태일 것이다. 또한 수년 전부터 학교건물을 전수 조사하여 내진보강공사가 연차적으로 진행 중이고 이미 시행된 경우도 많다. 아마도 이번 계획 대상 건물 대다수가 내진보강공사의 대상과 중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규모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이 우선순위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3. 18초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지난 2월 3일 추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4월 8일 사업자 설명회를 하였으며 7월 1일 1차년도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여론 수렴이나 공개토론회 등 관계대상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거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국민홍보성 사업이라는 오해를 사더라도 핑계하기 어렵다.

III. 계획상의 4가지 핵심추진 취지에 대한 비판

다음은 동 계획이 밝힌 **4가지 핵심추진 취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과 연계된 추진계획이 맞는가?

동 계획서에 따르면 핵심적 추진배경 중 첫 번째는 교육과정과의 연계이고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를 염두에 둔 듯하다. 학생선택형 학습과 융합수업을 위한 공간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공간혁신의 사례로 유연한 창의 융합 공간, 소규모 공간, 옥상 정원, 다목적 외부 공간(벤치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p.11-12)

그러나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교실 수의

획기적인 증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고 평균 학급인원을 30명으로 본다면, 고교학점제로 인하여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학생 수를 12명 이상일 때 개설한다고 하면 현재 교실수의 1.5배는 필요해질 것으로 짐작된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교실 증축이 뒤 따라야 한다.

현재의 추진계획에 첨부된 사례처럼 멋진 디자인의 다양한 교육공간이 나쁘지는 않으나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평범한 교실이라도 많이 증축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교실이 평범하다고 해서 학생선택형 창의 융합교육을 못할 이유는 없다.

2. 계획서에 나타난 스마트교실 혁신에 진정성 있나?

동 계획서에 따르면 스마트교실 혁신을 두 번째 추진 배경이라며, 무선인터넷, 디지털 기기로 맞춤형 개별학습 등을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차별 투자규모를 설명한 자료(p. 27)에는 건축비로 추정되는 예산 18조 5천억 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고, 4.21일 실시한 사업설명회에도 건축전문가와 실내디자인 전문가만 초청하였다. 동 계획서에서 홍보한 것과 같은 무선인터넷 및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개별학습이라는 새로운 학습형태에 대해서는 선언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시설개선사업에 스마트교실 혁신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

3. 그린학교 혁신은 교육활동 위주의 학교 편제에 부담만 가중시킨다.

동 계획서에 따르면 세 번째 추진 배경으로 '그린학교 혁신'을 내세우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생태교육을 체험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태양광 발전, 지열 이용 냉난방 장치, LED조명, 실내 정원, 생태놀이터, 정원과 연계한 휴게 공간,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생태놀이터 등은 지속적인 관리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는 교육을 주 활동으로 설계된 곳 이어서 교육활동 위주의 조직편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린학교 혁신이 결국 학습효과 증

진보다는 예산낭비만부를 여지가 많다.(학교운동시설 사용,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 등 비교)

4. 지역 공동체 연계사업은 현재와 다를 바 없다.

동 계획서의 지역연계 시설복합화로 학교공동체 혁신의 경우 제시된 사례를 보면 주로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공간의 지역주민 활용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미 현재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며,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시설개선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IV. 결론

시설개선사업과 미래학교추진사업이라는 두 개의 테마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추진계획인지 의문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이라는 야심찬 명칭을 붙이기는 했으나 사실은 노후화된 학교건물 개보수 및 증개축 사업을 미화한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노후화된 학교건물 시설개선사업일 뿐이다. 교육부가 시설개선에 따른 교육 효과를 과장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마치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발표한 것이 문제이다. 학부모들을 현혹시켜 정부정책에 대한 호감을 유인하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계획서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일방적인 추진 일정을 일단 중단하고 학부모나 국민들과 소통 및 설득하는 과정을 다시 밝을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홍보성 구호는 모두 내리고 좀 더 솔직하게 접근하는 계획으로 재추진하는 것이 옳다.

V. 기타

오히려 거창한 사업계획 명칭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불신만 가중되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부모 반발 이유>

- 1) 시설개선사업기간 동안 일부 학생 전출 및 모듈러교사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
- 2) 학부모 입장에서는 후배들을 위한 사업일 뿐 당장 자기 자녀는 피해를 입는다고 봄

- 3)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 - 혁신학교 도입키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구심
- 4) 수요자에 대한 사전 의사소통 및 논의절차 미흡 (끝)

Ⅰ 좌담회 자료 Ⅰ

그린스마트 학교의 허구와 문제점

토론 Ⅲ

중앙대학교 교수
이 성 호

‘green smart 학교의 허구와 문제점’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사실 나는 오늘의 토론을 맡기 전까지 ‘그린 스마트’학교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 교육부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임기 후까지 밀어 붙이겠다고 호언장담한 자사고 폐지 정책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자사고 폐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가시적이고 양적인 평등을 기저로 하는 발상으로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정책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green smart school’이라는 것을 들여다 보니 내용물이나 특징도 별로 없는 상품을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promotion(판촉;販促)하는 기막힌 홍보전술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사업의 기본 발상은, 전국에 걸쳐 건물과 시설이 노후된 학교 약 1400곳을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친환경 미래형 공간으로 바꾼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8.5 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 및 개축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새삼스럽게 ‘green smart’라는 용어를 그것도 영어로 써 가며 마치 대단한 교육사업을 전개하는 것처럼 요란을 떠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교육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입안한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학교시설 보수공사에 영어 이름을 붙여 그것이 무슨 대규모의 교육개혁 사업인양 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항변할지 모른다. 작년에 교육부가 이 사업의 홍보물로 제시한 자료에는 이 사업의 의의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②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

반 스마트교실 ③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그런데 이 설명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저탄소 제로 에너지가 무슨 뜻이며 그것이 학교의 건물이나 시설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현재 학교에는 computer 학습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사용자 참여 설계는 또 무슨 말인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설계한다는 뜻인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는 무엇을 뜻하는가? 포장을 위해 사용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나 용어들을 총동원한 인상을 준다. 그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부연 설명은 더욱더 가관이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정책은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황폐화된 미국의 재건을 목표로 한 것이었고 그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현재 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걸핏하면 한국판 뉴딜을 입에 올리는 위정자들은 이러한 배경에 대한 추호(秋毫)의 지식이라도 있는 것인가?

게다가 학교 건물과 시설을 시대에 맞게 보수하면 그것이 '신성장동력'을 생산한다는 발상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저탄소 친환경 학습환경'을 위해 '그린 스마트' 학교가 필요하다고 한다. ubiquitous는 computer technology에서 사용하는 영미권의 일반인들에게조차 생소한 용어인데 이것이 저탄소 친환경과 무슨 사실적 혹은 논리적 관계를 갖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내가 알기로 중국은 세계에서 최대의 탄소배출국인데 '그린 스마트'의 논리에 따르자면 중국의 교육환경은 최악일 뿐 아니라 중국에는 '신성장동력'도 없는 셈이다.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러다 보니 얼마 전 서울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한 모양이다. 가뜰이나 '혁신 학교'에 대한 불신이 깊은 다수의 학부모들이 '그린 스마트'학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회피하고 있는 듯 하다.

학교의 시설이나 건물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미적 감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는 없다. 시설물을 개축하고 보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교육의 질적 향상, 수업의 만족도 제고, covid 19 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완책, 장기간의 online 수업으로 야기되는 교육의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 등등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고 '그린 스마트'운운하고 있는 정부 교육부서와 당국자들의 작태가 심히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제발 교육의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길 바란다. 교육을 한낱 수단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교육당국자들에게 특히 전문성을 주문하고자 한다. 쉽게 말해 교육에 대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그럴듯한 용어나 모방할 생각 말고 그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역사에 대해 심도있게 학습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컨슈머워치